

한일무역불균형의 본질 ? 경제문제의 정치적 이슈화 ?

서 정 근

1. 머리말

1965 년의 한일양국의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소위 수출주도형 개발정책에 의하여 한국의 무역규모는 계속 확대되었고 산업구조도 고도화 되었다. 소득수준은 올라 1990 년대 말에는 선진국 클럽인 OECD 가맹도 성취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국경제가 이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과 미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두 나라의 '지원' 없이는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경제성장과정을 통해 일본에 대한 불만이 오랫동안 맺혀 왔다. 국교정상화시에 완전히 해소가 안 된 문제들이 밀천에 깔려 있으나 주된 요인은 일방적이고 만성적인 무역불균형이다.

한일관계를 논할 때 반드시 현안사항으로서 거론되는 것이 독도의 영유권, 어업협정, 역사인식문제, 대일무역역조 등이다. 독도 문제는 한일조약 체결 시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서로가 영유권을 주장하여 대립하는 상태이고 그로 인하여 어업협정도 논란을 일으킨다. 역사문제는 일본측에 주관적인 역사관을 내세워 침략을 정당화 하려는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은 대립의 구도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무역불균형문제는 이런 문제와 성격을 좀 달리 한다.

과거의 식민지 시대와는 달리 일본이 강압적으로 거래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한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일본의 자본재가 필요했던 것도 뻔한 사실이다. 게다가 대외 적자로 인한 저축부족을 일본자본으로 벌충한 것도 다름 아닌 한국정부의 선택이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한국의 경제개발은 자주적인 판단에 의해 전개되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일무역 적자가 왜 항상 현안사항으로서 다루어졌을까. 본론의 목적은 이것이 문제시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 보는데 있다. 무역불균형이 왜 해소가 안 되는가, 그 구조와 배경, 또 대일적자가 미치는 영향 등을 논하면서 이 문제가 한국 내에서 어떻게 거론되어 왔는가를 살펴 본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극일본' 등 대일비판의 본질을 밝히고 향후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일무역의 추이

대일무역적자의 규모

표 1 은 1965 년 이후 36 년 동안의 수출입 추이이다. 명목가격으로 총수출은 984 배, 총수입은 346 배 증대했고 대일무역은 수출이 465 배, 수입은 190 배 증대했다. 별로 의미가 없는 이런 비교를 하면 대일수입의 규모는 총수입의 확대 규모보다 작게 나타난다.

무역수지는 수요 초과형 개발정책에 의하여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해왔으며 대일무역수지도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86 년부터 89 년까지는 소위 3 저 현상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나, 여건의 변화로 다시 적자 기조에 돌아 섰다. 1998 년 이후는 IMF 위기를 거쳐 긴축정책 하에서 그때까지의 성장 패턴이 전환되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일무역수지는 무역수지 전체가 흑자로 전환하더라도 시종일관 적자 상태에 있다. 전체의 무역적자 규모를 훨씬 넘는 수치를 기록한 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런 통계상의 숫자를 보면서 '만약에 대일적자가 없었으면 한국의 무역수지는 흑자가 될 것이다.' '한국이 죽도록 고생하여 세계에

표 1. 대일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증가율은 %

	총수출	증가율	총수입	증가율	무역수지	대일수출	증가율	대일수입	증가율	대일무역수지
1965	175	47.1	463	14.6	-288	44	15.2	167	51.8	-123
1966	250	42.9	716	54.6	-466	66	50.0	293	75.4	-227
1967	320	28.0	996	39.1	-676	85	28.8	443	51.2	-358
1968	455	42.2	1463	46.9	-1008	100	17.6	624	40.9	-524
1969	623	36.9	1824	24.7	-1201	133	33.0	754	20.8	-621
1970	835	34.0	1984	8.8	-1149	234	75.9	813	7.8	-579
1971	1068	27.9	2394	20.7	-1326	262	12.0	962	18.3	-700
1972	1624	52.1	2522	5.3	-898	408	55.7	1031	7.2	-623
1973	3225	98.6	4240	68.1	-1015	1242	204.4	1727	67.5	-485
1974	4460	38.3	6852	61.6	-2392	1380	11.1	2620	51.7	-1240
1975	5081	13.9	7274	6.2	-2193	1293	-6.3	2433	-7.1	-1140
1976	7715	51.8	8774	20.6	-1059	1802	39.4	3099	27.4	-1297
1977	10046	30.2	10811	23.2	-765	2148	19.2	3926	26.7	-1778
1978	12711	26.5	14972	38.5	-2261	2627	22.3	5981	52.3	-3354
1979	15505	22.0	20339	35.8	-4834	3353	27.6	6657	11.3	-3304
1980	17505	12.9	22292	9.6	-4787	3039	-9.4	5858	-12.0	-2819
1981	21254	21.4	26131	17.2	-4877	3444	13.3	6374	8.8	-2930
1982	21853	2.8	24251	-7.2	-2398	3314	-3.8	5305	-16.8	-1991
1983	24445	11.9	26192	8.0	-1747	3358	1.3	6238	17.6	-2880
1984	29245	19.6	30631	16.9	-1386	4602	37.0	7640	22.5	-3038
1985	30283	3.5	31136	1.6	-853	4543	-1.3	7560	-1.0	-3017
1986	34714	14.6	31584	1.4	3130	5426	19.4	10869	43.8	-5443
1987	47281	36.2	41020	29.9	6261	8437	55.5	13657	25.7	-5220
1988	60696	28.4	51811	26.3	8885	12004	42.3	15929	16.6	-3925
1989	62377	2.8	61465	18.6	912	13457	12.1	17449	9.5	-3992
1990	65016	4.2	69844	13.6	-4828	12638	-6.1	18574	6.4	-5936
1991	71870	10.5	81525	16.7	-9655	12356	-2.2	21120	13.7	-8764
1992	76632	6.6	81775	0.3	-5143	11599	-6.1	19458	-7.9	-7859
1993	82236	7.3	83800	2.5	-1564	11564	-0.3	20016	2.9	-8452
1994	96013	16.8	102348	22.1	-6335	13523	16.9	25390	26.8	-11867
1995	125058	30.3	135119	32.0	-10061	17049	26.1	32606	28.4	-15557
1996	129715	3.7	150339	11.3	-20624	15767	-7.5	31449	-3.5	-15682
1997	136164	5.0	144616	-3.8	-8452	14771	-6.3	27907	-11.3	-13136
1998	132313	-2.8	93282	-35.5	39031	12238	-17.1	16840	-39.7	-4602
1999	143685	8.6	119752	28.4	23933	15862	29.6	24142	43.4	-8280
2000	172268	19.9	160481	34.0	11787	20466	29.0	31828	31.8	-11362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무역동향지표』 2001.5.

서 모은 흑자를 일본에 다 빼앗긴다.' 는 식의 논조가 들리게 되었다. 또 여러 논자들이 시기마다 대일무역적자 누적 액을 내세우면서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과연 대일무역적자의 누적은 그렇게 심각했던 일이었는가. 지나고 보면 한국의 경제발전이 눈부시게 전개되어 온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지만 IMF 위기 이전에도 1970년대 초반에는 부실기업문제가 터졌고 두 차례의 석유파동, 그로 인한 1980년 전후의 경제위기 등 몇 개나

고비를 넘어 왔다. 81년에는 대외채무가 300억 달러, 84년에는 400억 달러 선을 넘어 당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누적채무국으로서 데포르트의 위험성까지 지적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혀 개선의 조짐조차 안 보이는 대일무역불균형을 심각한 문제로 거론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신문, 잡지 뿐만이 아니라 학자나 은행, 행정기관에 속하는 전문가로 불리우는 사람들마저 감정적인 논리를 전개했던 것은 웬일일까. 대일무역적자가 줄어들면 무역수지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리라는 논리의 전개는 너무도 단순하고 직선적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하면서 선진국을 자칭하는 나라가 한 나라를 특정하여 무역제한조치를 오랫동안 적용한 정책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본다.

1970년대 전반에는 대일수입 증가율이 약세를 보여 한국의 공업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대일무역불균형도 개선되리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대일적자의 규모는 확대의 한 길을 향하여 어느새 낙관은 비판으로 변하고 차차 초조해졌다고 생각된다. 86년에 54.4억 달러의 최고치를 기록한 대일무역적자는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과 발 맞추어 줄어들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반전해 10년 후인 96년에는 거의 3배가 되는 156.8억 달러에 달하였다.

한 마디로 말 하면 한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는 저축-투자간 밸런스의 불균형에 기인한 것이며 만약에 팽창적인 개발 정책을 추구하지 않거나 성장 속도를 좀 더 줄였다면 무역적자의 추이도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 결과 누적채무문제도 별 모습을 보였으리라 추정된다. 한국과 자주 비교되는 대만의 경우가 좋은 예이고, 또한 IMF 위기직후의 상황도 그것을 실증하고 있다.

대일무역적자의 원인과 구조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의 원인과 그 구조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 왔고 개선 방향도 제시되어왔다.

큰 테두리로는 한일무역을 남북무역의 전형적인 스타일로 규정하는 시각이 있다. 경제력의 격차 즉 발전단계의 차이가 수직분업을 이루어 선진국의 흑자를 구조적으로 초래한다는 견해다. 공업화의 수준과 생산성의 차이가 경쟁력의 차이로 나타난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비롯한 성장, 개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공업화를 위한 자본재와 원자재의 대량 수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을 선택함으로써 국제경제력의 향상은 필수 조건이 되었다. 노동집약부문 이외에 비교우위가 없는 상황에서 설비 등의 기계류나 중간재는 응당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고 그 적당한 공급자가 바로 일본이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패전 이후 개혁과 복구를 거친 일본은 1950년대 후반부터 고도경제성장 과정에 들어 섰다. 65년에는 경상수지가 흑자 전환해 그 기조는 이후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이런 시기에 한국도 공업화를 본격화한 것이다.

경제계획을 세워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데도 필요한 자본이 충분하지 않았다. 1965년 당시에 해외에 투자할 만큼 여유롭지 않았던 일본도 60년대 후반부터 축적되는 자본을 환류시킬 수 있게 되었다. 청구권자금 자체는 지금도 비판이 있듯이 당시 일본이 한일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한국을 교전상대로 인정 안 하고 전후 배상이란 말을 끝까지 거부해 지어진 명칭이다. 총 5억 달러는 무상자금 3억 달러와 유상자금 2억 달러로 구성되었고 이밖에 민간차관 3억 달러의 제공도 같이 체결되었다. 한국이 원래 주장한 것과는 달리 절대 액수도 넉넉하지 않은데다가 유상자금은 타이드론으로 공여되어 한국은 일본에서 빌린 돈으로 일본으로부터 자본재와 원자재를 구입해야 했다.

산업별로 청구권자금이 어떻게 배분되었는가를 보면 5억 달러의 55.6%는 광공업에 투입이 되었고, 그 중의 43%는 포항제철소 건설에 쓰여졌다. 또한 자재 별로는 무상자금의 40.4%와 유상자금 모두가 자본재구입(그 중 51.6%가 일반기계)에 충당되어 다 일본부터 수입했다.

이러한 공업화의 초기 단계에서 일본의 자본재, 중간재를 도입해 경제건설을 본격화한 것이다. 또한 식민지통치의 부의 유산을 이은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제품과 거래양식, 사고방식 등은 낯선 것들이 아니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쉽게 한국의 경제사회에 침투될 요소를 갖추어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는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정책아래 계속적인 차관 도입과 직접투자, 기술도입이 늘어나 한국의 대일수입은 해마다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로로 대일 의존적 성장패턴은 정착된 것이다.

수출지향적 공업화의 추진은 해외 저축을 이용한 경제개발의 당연한 귀결이기도 했다. 국내 자본이 부족한 상태로 경제개발을 추진하려면 저축율을 높여야 한다. 투자의 원천이 충분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의 속도는 응당 늦어진다. 또 희소한 외화를 아끼려고 전개되는 수입대체정책은 보호정책이기 때문에 경쟁력 향상이란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한국은 국내저축의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안정적인 성장정책이 아니라 해외 저축을 이용하는 더 적극적인 전략을 선택했다. 소위 원조경제부터 차관경제로의 이행이라고도 지적되는 외자 의존형 경제개발은 위에서 살펴본 듯이 일본자본의 도입부터 본격화되었다. 자본을 제공하는 일본측은 그 돈으로 자기 나라 제품이 팔리니까 생산 확대에 기여가 되고 한국은 자본 부족을 해소할 수가 있어 양국의 이익이

합치된 셈이다.

빌린 돈은 갚아야 할 도리니까 한국은 외화를 벌어야만 한다. 당연히 수출을 확대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 제조업의 수출은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원자재나 부품 등을 처음부터 해외에 의존했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처음은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요소가격이 올라가면 그것을 상쇄할 만큼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생산성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연구개발은 하되 해외부터 질 좋은 자본재와 중간재를 구입하는 것이 더 안일한 방법이었다.

20세기 후반은 그야말로 기술혁신의 시대,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시대였다. 기술혁신의 주역은 다름 아닌 선진국이었다고 한국이 도입한 기술을 내부화 하는 사이에 일본에서는 다른 기술이 개발되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수준, 생산성이 높아져 수출구조도 고도화되어갔지만 일본도 역시 그 동안 성장을 했다.

물론 30년 사이에 양국의 무역구조는 수직분업으로부터 수평분업에 점차 변해 왔고 기술수준차이가 상당히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의 대세계무역에서 보이는 큰 변화만큼 한일무역의 구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

표 2와 3은 근년의 한일 품목별 수출입을 본 것이다. 1990년대 후반 대일 수출 중 기계류의 비중은 30%를 넘게되었다. 94년에 수출품목중 가장 컸던 섬유제품의 비중이 20%를 밀돈 반면 전기기계류의 비중이 20%를 넘어 주역 교체가 이루어졌다. 일반기계 또한 99년에 컴퓨터 관련제품의 비약적 증가로 그 비중이 늘어났다.

표 2. 주요품목별 대일수출

	수출총계	식료품	섬유제품	철강	잡제품	일반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
1994 년	135 16.9 (12.6)	25.8 (19.1)	14.5 (10.8)	14.2 (10.5)	5.5 (4.1)	29.8 (22.1)	-	1.7 (1.3)	
1995 년	172.6 18.2 (10.6)	25.0 (14.5)	18.4 (10.7)	16.1 (9.3)	9.7 (5.6)	47.6 (27.6)	-	2.2 (1.3)	
1996 년	159.5 18.2 (11.5)	19.5 (12.3)	14.7 (9.2)	14.5 (9.1)	10.0 (6.3)	38.8 (24.3)	1.1 (0.7)	2.7 (1.7)	
1997 년	145 16.4 (11.3)	13.7 (9.4)	14.5 (9.9)	10.8 (7.5)	9.3 (6.4)	34.1 (23.3)	1.1 (0.8)	4.9 (3.4)	
1998 년	121.1 17.4 (14.4)	12.4 (10.2)	11.4 (9.4)	8.6 (7.1)	9.8 (8.1)	26.2 (21.6)	0.8 (0.7)	2.2 (1.9)	
1999 년	161.6 20.3 (12.6)	14.1 (8.8)	10.9 (6.7)	9.8 (6.1)	23.4 (14.5)	34.1 (21.1)	1.4 (0.9)	5.1 (3.2)	
2000 년	204.5 17.8 (8.7)	13.4 (6.6)	12.7 (6.2)	10.4 (5.1)	31.6 (15.5)	47.8 (23.4)	1.6 (0.8)	5.5 (2.7)	

단위: 억 달러, ()안은 수출총계에 대한 비중 %

(자료) 經濟産業省 "通商白書" 各論

한편 대일수입을 보면 총수입의 60%가 자본재이다. 이 수준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변화가 없다. 90년대 후반에는 전기기계의 수입액이 가장 커져 이어서 일반기계 화학품, 금속품의 순서가 되어있다. 비중은

표 3. 주요품목별 대일수입

	수입총계	화학품	철강	일반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
1994 년	243.5 31.2 (12.8)	16.9 (7.0)	68.7 (28.2)	62.5 (25.7)	7.2 (2.9)	11.1 (4.6)	
1995 년	312.9 41.7 (13.4)	23.5 (7.5)	85.0 (27.2)	81.0 (25.9)	7.9 (2.5)	16.5 (5.3)	
1996 년	293.3 37.8 (12.9)	22.0 (7.5)	83.5 (28.5)	78.5 (26.8)	6.9 (2.4)	13.7 (4.7)	
1997 년	260.8 37.5 (14.4)	14.5 (9.9)	62.0 (23.8)	77.2 (29.6)	5.3 (2.0)	12.4 (4.8)	
1998 년	154 26.6 (17.3)	11.7 (7.6)	23.9 (15.5)	52.3 (33.9)	3.4 (2.2)	6.2 (4.0)	
1999 년	230.7 35.3 (15.3)	19.9 (8.4)	39.9 (17.3)	78.5 (34.0)	5.1 (2.2)	11.7 (5.1)	
2000 년	306.9 42.6 (13.9)	25.1 (8.2)	60.8 (19.8)	99.4 (32.4)	6.6 (2.2)	19.7 (6.4)	

단위: 억 달러, ()안은 수입총계에 대한 비중 %

(자료) 經濟産業省 "通商白書" 各論

전기기계가 30%를 넘어 으뜸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기계의 비중은 줄고 있다. 화학품과 금속품의 비중은 계속 보합상태에 있다.

표 4로 수입을 내외 수요별로 보면 35%~50%가 수출용으로 수입되었다.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수출지향적 개발정책아래 수출이 증대하면 할수록 수입이 증대한다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지적은 그림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과 대일수입 증가율을 나타낸 것인데 약간의 타임

표 4. 용도별 수입액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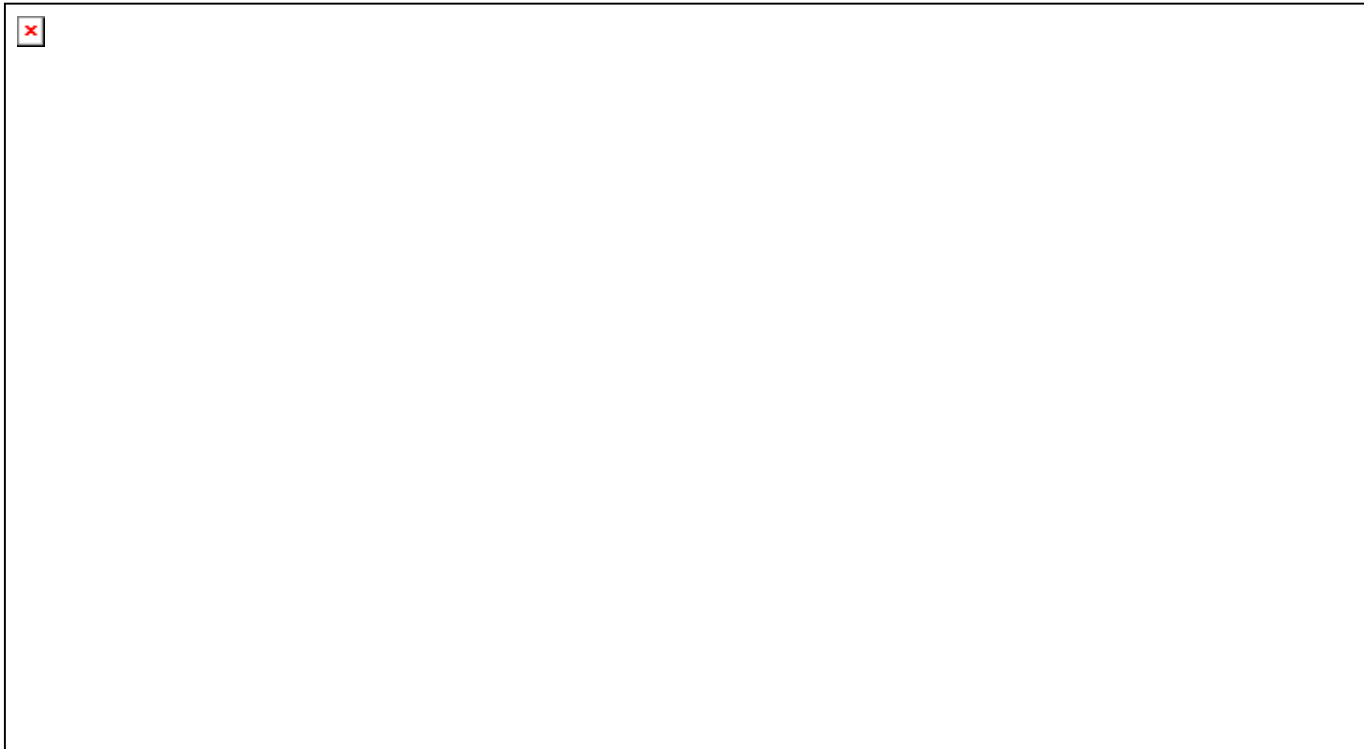
	총수입	수출용	내수용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1992 년	19458 7348 (37.7)	12110 (62.2)	11348 (58.3)	6723 (34.6)	1386 (7.1)	
1995 년	32606 11581 (35.5)	21026 (64.5)	20105 (61.7)	10648 (32.7)	1852 (5.7)	
1996 년	31449 10882 (34.6)	20566 (65.4)	19648 (62.5)	10140 (32.2)	1660 (5.3)	
1997 년	27907 10489 (37.6)	17418 (62.4)	16954 (60.8)	9425 (33.8)	1527 (5.5)	
1998 년	16840 8941 (53.1)	7899 (46.9)	9375 (55.7)	6618 (39.3)	848 (5.0)	
1999 년	24142 11966 (49.6)	12176 (50.4)	14245 (59.0)	8606 (35.6)	1290 (5.3)	
2000 년	31828 14802 (46.5)	17026 (53.5)	19507 (61.3)	10503 (33.0)	1817 (5.7)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표 1 과 같음.

래그는 있으나 거의 같은 궤도를 그리고 있어 한국의 수출이 대일수입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 추측된다.

이처럼 한일무역에 있어서 구조 변화가 진행되면서도 한국의 대일자본재의존이란 성격은 여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 동안 대일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한국의 기계산업이 발전되었음을 대일무역의 숫자를 통해서도 짐작이 되나 원래의 목적이었던 대일무역불균형 해소와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표 1 과 같음.

대일무역적자의 '문제점'

대일무역적자는 왜 문제일까.

무역수지의 적자는 수급불균형시 발생한다. 즉 상대적으로 공급수준이 낮거나 수요가 초과상태에 있는 경우 나타난다. 발전단계가 아주 미숙할 때는 생산능력이 뒤떨어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생산물을 수입해야 한다.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되는 수요확대에 공급이 못 따라갈 때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만 높은 성장율이 유지된다. 그런데 수입이 계속되면 당연히 외화가 부족해지니까 보통은 왕성한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긴축정책을 시행한다. 그리 하면서 인플레이를 억제해 안정적인 경제운명을 도모한다.

발전도상국이 경제개발을 시도할 경우 애로가 되는 첫째가 국내자본의 부족이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자본의 동원이나 생산요소의 배분이 실행된다. 한국도 정부주도하 국내저축을 동원하는 한편 모자란 부분을 일본에 협력을 요청했던 것이다. 제공받은 자본은 각종 사회간접자본 정비에 투자되었으며, 당시 국내에서 생산 못했던 기계류를 수입하여 공급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충분한 형편이 아니면서 적극적인 개발계획을 세워 부족한 것은 일본에 협력을 요청, 이런 구도는 1960년대 후반부터 정착이 되었다. 한일정기각료회담 때마다 경제문제의 주제는 무역불균형과 자금협력문제였다.

만약에 일본이 자금만 공급하고 제품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했다면 무역불균형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경우 일본이 개발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했으리라고는 못 믿는다. 일본이 한국에 자금 제공한 까닭은 자기 나라 제품이 팔리니까이지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한국경제의 자립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1970년에 발표된 '일한장기경제협력시안' 소위 '矢次시안'에서는 "일본경제계는 한국을 단순한 이윤획득을 위한 대상으로 삼는 단계에서 「합병형태」를 위한 장기협력으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점차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제협력권 확립을 내다보는 시안은 개인의 견해로써 발표가 되었으나 한국내에서는 일본의 속셈이 들어난 예라고 해서 떠들석거렸다.

무역불균형문제는 1968년 2월에 열린 제3차 한일합동경제간담회의 공동성명에서 시정할 안건으로 표명이 되어 8월의 제2차 한일정기각료회의의 공동성명에서도 "호혜와 지역협력의 원칙에 입각하여 무역의 확대와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표기되었다.

한국정부는 관세인하나 특혜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이것은 1차 상품과 노동집약적 가공제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였다. 이 시기의 논조를 보면 대일수출을 어떻게든 늘이려는 자세가 엿보이며 상호주의적인 인상을 받는다.

일본측은 항상 협력할 것을 약속했고, 국제분업의 원칙에 따라 확대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의 한국제품에 대한 개방조치는 국내산업보호의 관점에서 신중했다. 무역불균형은 해소가 안 되고 그 대신처럼 개발자금이 협력의 명목아래 계속 제공되었다. 이러한 양국정부의 구도는 1960년대 말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었다.

한일간의 경제·무역구조가 정착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矢次시안'이 발표되자 대일의존적 경제개발은 한국기업의 하청계열화를 통한 대일종속이고 해방전의 상황에 되돌아가게 될 중대한 문제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게다가 1972년에는 일본의 차관도입기업이 줄이어 파탄의 위기에 몰려 8.3조치가 시행되었고 73년에는 국내외의 정치 정세도 아주 예민해졌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된 그 당시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반일감정은 격화되어 대일 비판이 쏟아졌다.

이 시기에도 대일무역적자가 어떤 악영향을 미쳤을까. 부정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이 눈에 많이 띄었으나 실제로 불이익을 겪었다는 예가 잘 안 보인다. 한국정부는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양국 경제관계 증진의 중요한 과제"이다 하면서 해마다 이 문제를 일본정부에 호소를 했다. 그러나 이것이 개별적인 무역마찰로 여겨진 적은 없다.

일반적으로 두 나라간의 무역마찰은 발전수준이 낮은 측의 집중적인 수출 공세에 의하여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에 발생한다. 한미간의 마찰, 미일간의 마찰, 최근의 한중, 중일간의 마찰 등은 거의 비슷한 구도로 볼 수가 있다. 미일 경우는 섬유부터 시작하여 텔레비전,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으로 이어졌으며 한미경우도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2001년의 중일마찰은 버섯이나 수건 등 노동집약적 부문에서 저렴한 수입품에 의해 가격과파 현상이 일어나 일본이 국내산업과 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취하여 중국이 보복조치로 대응했다. 한중간의 마늘문제도 같은 패턴이었다.

한일간에서는 이런 구도가 거꾸로 된 셈이다. 일본의 자본, 기술집약적제품이 한국에 급속히 들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무역장벽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한국의 자세와 주장은

무역의 확대균형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도 옳바른 것이었다. 하지만 무역불균형이 해소가 안 됨으로써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지 왜 시정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표현되지 않았다.

일본제품이 한국에 들어와 국내산업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거의 못 들었다. 일본의 자본재는 한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었던 것들이며 소비재 등 국내산업과 경합이 될 부문은 한국이 보호를 했기 때문이다.

무역수지 전체의 개선을 위해서라는 해석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 2 개국간의 무역수지를 반드시 균형시켜야 할 근거는 없다. 한국정부는 “만성적인 대일무역역조의 지속은 기계류, 화학원료 등 자본재 및 기초산업 분야의 성장을 제약하는 등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일본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 시켜, 구미지역과의 통상마찰을 촉발시킴으로써 경상수지 흑자구조의 정착을 어렵게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또한 “대일 무역수지 불균형의 지속은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거래의 균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일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역조를 유지한 채 전체 무역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은 여타 지역에서 큰 흑자를 내야 함을 의미하므로 이들 지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라고 하겠다.” 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일본 이외 일부 석유수출국과의 무역에서도 구조적인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들과의 무역균형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는 말을 듣기 힘들다. 다른 나라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두 나라간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것도 무역상호주의적 발상이고 자유무역과 국제분업의 원칙과도 어긋나다. 무역적자를 반드시 수출의 증대로 충당해야 할 것도 아니고 영국처럼 무역외수지의 흑자로 무역수지의 적자를 균형시키는 나라도 있다.

또한 대일무역적자가 자본재 및 기초산업의 성장을 제약한다는 주장은 앞뒤를 잘 못 가린 말이다. 대일의존적인 체질이 국내에서의 개발 인센티브를 저하시킨다는 경향은 있으나 ‘대일역조의 지속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저해할’ 원인이 될 수는 없다. 무역수지 적자는 결과일 뿐 결코 원인은 아니다.

대일무역불균형문제는 어느새 무역수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경제의 대일의존성의 문제로 바뀌고 무역불균형과 대일의존적 경제구조의 문제를 동일시하거나 혼합 시킨 감이 난다. 대일교역에서 계속 발생하는 커다란 적자와 한일간의 분업구조가 상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단 결과와 원인을 혼동해서 정확하게 못 본다면 그 대응책을 적절하게 마련할 수는 없다.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 없듯이 한국에 있어서 일본이란 나라는 특별한 존재다. 과거의 역사에 얽매어 일본이 상위에 위치하거나 우세가 되면 반사적으로 경각성을 높이거나 반발심을 불러일으킨다. 양국간의 우열관계는 주종관계로 해석되기 쉽고 이런 시각에서는 대일무역적자의 누적이 응당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한국이 일본의 영향력 아래 편성된다는 사실을 용납하기 싫다는 게 한국인의 솔직한 감정일 것이다. 그래서 한일국교정상화 때도 한국이 너무 많이 양보를 한다고 반대가 심했고 그 이후의 모습도 경제주권을 장악 당할까 봐 경계심이 고개를 쳐들었다고 볼 수 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계속 앞서 가는 일본과의 교역은 당연히 주종관계로 비추어졌다.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한 일본제품과 시스템은 품질이 좋아서 간단히 다른 나라와 대체하기가 어려워지고 그것이 생산수단의 필수여건이 되면 수요자 측의 선택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일종속, 예속이란 이미지가 한국사회와 사람들 심리 속에 침투했다.

한국정부는 대일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일본시장의 개방과 기술이전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해마다 요청을 했으나 불균형의 해소는 커녕 대일적자는 계속 늘기만 했다. 그래서 정부는 끝끝내 직접적인 대책을 세워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

3. 수입선다변화

대일수입제한정책

2 개국간 무역에 한정하면 적자를 축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수출의 확대와 수입의 축소, 지극히 단순하긴 하나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 그 동안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으로 대일수출 확대를 위해 힘을 썼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 대일 수출이 크게 늘지 않는 이유로 일본의 관세제도, 까다로운 검사제도나 폐쇄적인 거래습관 등 비관세 무역장벽의 존재, 소극적인 기술이전 등이 거론되어 왔다.

일본 측에서는 한국내의 주장이 오해에 기인한다는 반론이 제기된 바 있다. 간단히 요약 하면 관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고 비관세장벽도 한국 기업의 마케팅이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서 느껴지는 것이다. 기술이전도 부메랑효과를 걱정해서 망설인다는 인식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이지 일본이 가장 큰 기술제공국이라는 것이다.

한국인에 비하여 일본인은 까다로워 판매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핑계 삼는 일이고 각국마다 다른 선호에 알맞게 생산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시장 개척을 방해하는 무역장벽 등도 일본기업과의 제휴, 위법이면 고발 등의 방법도 선택할 수 있고 관습적인 문제라면 익숙할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또한 부메랑 효과에 관한 견해도 편중된 일부의 견해가 독보의 길을 간 경향이 있다. 명명자인 시노하라 미요헤이박사는, 부메랑효과에는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있고 기술이전을 하면 정과 부 두 가지 효과가 함께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선진국 측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정의 효과가 부의 효과를 능가하니 기술 이전은 이득이 된다고 밝혔다. 즉 앞으로 기술 수요측이 경쟁상대로 성장한다는 부의 효과를 감안해서도 무역확대효과 등으로 서로의 이익이 늘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간에서 부의 부메랑효과가 두려워 기술이전을 망설였다는 소문도 없지 않지만 자주 듣는 얘기가 아니다. 기술이전이란 무상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거래이다. 제공하는 기업은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것이지 불이익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내지 않는다. 그러나 모방될 가능성이 큰 기술이라면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이전할 것이다. 또 조건으로서 자본참가, 관련기술개발의 제한, 시장제한, 관련제품 구입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런 저런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난리 치는 것은 경제논리 외의 전제를 두고 하는 소리다. 어느 한쪽만이 이득을 얻는 기술이전은 없고, 비싼 돈 주고도 못사는 기술은 못 구하는 법이다.

경제협력이란 말에 오해와 착각이 따를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기술협력에 관해서는 특히 그렇다. 현장에 없는 사람들의 스테레오 타입형의 주장이 적지 않다.

아무튼 한국정부는 대일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출확대 노력과 더불어 직접적인 수단으로 대일적자 축소에 나섰다.

수입선다변화, 1978년 5월에 시행된 이 정책은 명목상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경제 여건의 변동에 의한 충격을 분산시켜 불이익을 감소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에 편중된 수입을 다른 나라에 옮김으로써 대일무역수지의 적자를 줄이고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대일무역적자의 불이익을 명쾌하게 제시 안하고 수입억제정책을 시행했다는 이 사실은 대일무역적자의 삭감이 자기목적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대일불균형은 대일의존적 경제구조, 일본에 대한 경제적 종속 등의 이미지화에 이용되고 그 표징이 된 것이다.

수입선다변화정책은 1986년에 들어서서 더 명확하게 그 모습을 나타내었다. 한국정부는 “대일수출의 획기적 증대와 기계류, 부품의 국산화 및 수입선전환 등을 통한 대일수입의 적정화에 기본목표를 두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강구” 하기 위해 경제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일수출촉진실무위원회’와 ‘기계류 및 부품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어서 대일무역적자개선 5개년계획(1987~91)을 책정했다.

정부는 수입선전환은 강제에 의해서는 실효를 거둘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경제성원리에 입각한 자율적 실천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외상품 및 공급선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국내업계에 체계적으로 전파함으로써 기업 스스로가 수입정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한다고 했다.

1980년대 이후 민간주도형의 경제성장을 지향한 바람에 그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하고 동시에 들어가는 대일적자의 대책은 세워야 하고 딜레마에 고민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기업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대일불균형의 시정에 관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87년에 지정되었던 수입선다변화 품목은 총 642개, 91년에는 258개까지 줄었다. 정부는 90년대에 들어서 이 정책이 시한적 조치임을 표명하면서 93년부터는 지정품목을 새로 지정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임을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틀은 대일무역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들어 99년에 폐지될 때까지 유지했다.

수입선다변화정책의 평가

대일수입이 거의 기계류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이기 때문에 그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 하면서 국내산업과 기업의 육성을 조성, 기계산업 발전의 환경정비를 한다. 이 수입선다변화와 기계류의 국산화는 겉으로 상호 보완적인 정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제수지 개선이란 거시적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결함을 가진 대책이었다.

대일수입을 금 하도 다른 지역에서 수입을 하면 국제수지의 개선에는 직결하지 않다. 수입선을 돌리고 일본보다 더 비싸게 되거나 불편해지면 국내에서 공급선을 찾거나 개발하자는 인센티브가 생긴다. 이 점만이 이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보호책인 수입대체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대일수입만을 제한한다는 것은 논리적 정합성을 결한다. 진정 수입대체를 하려면 자동차를 그랬듯이 전면적으로 제한조치를 취해야지 오직 대일수입을 줄이고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학적 근거를 제시 못한다.

국산화계획기간 중 1986~90년의 성과를 보면 기술개발자금이 5040억원, 수입대체, 수출산업 시설자금이 1조 1172억원 지원되어 국산화 고시된 3814개의 품목 중 45.5%가 개발완료, 37.4억원의 수출대체 효과와 24억원의 수출증대 효과가 추정되었다고 한다.

한편 대일무역의 추이를 보면 대일수입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일수출 증가율도 90년대 전반은 마이너스를 기록해 무역적자의 규모는 계획 시작전보다 오히려 커져 여전히 상황이 지속되었다. 결국 대일무역적자개선 5개년계획은 눈에 띄는 결과를

못 내고 끝을 맺었지만 그 이후도 정책 당국은 대일무역불균형이 해소 안 된 것을 이유로 수입다변화정책을 유지했다.

효과적이지 않은 정책을 계속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제수지의 개선 이외의 다른 목적이 없었을까. 처음부터 특별한 심리가 작용했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대일무역적자 그 자체를 ‘악 늪’으로 몰아치는 심리, 즉 반일, 혐일, 극일 등의 감정이다.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대일무역불균형은 한국경제 발전의 필요악으로 여겨져 왔다. 높은 경제성장율을 지향함으로써 성장의 질보다 양이 우선되어 자본과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 그 결과가 바로 대일무역적자이다.

1986년부터 무역수지가 흑자 전환을 했는데도 여전히 개선의 모습을 안 보이는 대일불균형, 경제논리를 초월한 정책 시도에는 정책당국자들의 초조한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는가.

경제정책을 책정할 때 논리적정합성, 경험적정합성, 가치정합성, 실행가능성 등 네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대일무역적자 개선책은 이런 요소를 충분히 내포한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2 개국간의 무역균형을 이루어야 할 논리적 근거는 없고 경제적으로 일본제품을 외면해야 할 가치판단도 내리기 어렵다. 게다가 이미 뿌리 깊이 정착된 대일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개편 하려면 수입제한 정도의 조정레벨 정책으로는 역부족이고 구조 개조나 근본적인 전환레벨의 정책이 요구된다.

정책당국은 정책이 모순을 내포하고 이를 실행하더라도 결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선다변화는 계속되었다.

4. 대일의존형 경제구조

대일의존체제의 확립

‘한일간에 놓여진 문제, 그 중의 하나가 무역불균형’ 40년 가까이 되풀이 되어온 틀에 박힌 말이다. 웬만한 노력을 기울여도 시정이 안 된 대일무역적자는 경제성장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다.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역불균형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초래하는 구조이며 여태까지 전개해 온 경제개발정책 그 자체의 모습이다. 대일의존성을 비판한다는 것은 곧바로 한국의 경제체제의 비판에 연결된다.

1962년 이후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했다. 소득의 절대수준을 인상시키고 상대적으로 북한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경제발전이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으로 여겨졌다.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도 그의 확보를 위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파악된다. 물론 시급하게 다그친 배경에는 미국의 극동정책 변화가 있었고 박정희 정권의 친일적 성격에 기인한 부분도 있다. 과거의 청산을 애매하게 한 채 크게 양보를 한 것은 자본부족을 보완해야 했던 경제적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일본정부도 당시 남한이 적화되면 일본도 큰 위협에 처하게 된다고 인식, 한국을 적극 도움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화주의 헌법의 이념 아래 군사적으로 도움 주는 협력은 제한되었기에 속으로는 한국의 반공 방과제론을 인정하면서 표면으로는 경제협력에 특화 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 를 구축해 나갔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유력한 시장이고 정치적으로는 자기들의 안전판으로 기능을 다하는 한국에 1965년 이후 치밀하게 침투해 갔다. 일본의 의사가 어떻든간에 중요한 것은 이런 한일관계를 맺은 당사자의 한 쪽이 한국 정부였다는 것이다.

‘대일굴복’이란 오명까지 받으면서 관계개선을 한 정부는 가능한 일본의 자본을 끌어 들일려고 애 썼다. 1968년의 제 2차 한일정기각료회의, 1969년에는 미일 수뇌회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안전보장상 일련타생인 것을 확인해 소위 ‘한국조항’이 선언되었다. 이 정치적 흐름에 발 맞추어 제 4차 한일정기각료회의에서는 농업근대화와 수출산업의 육성,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일본기기기재의 수입자금 명목으로 한국 측이 1억 달러의 차관 제공을 요청했다. 이렇게 스스로 일본의 자금과 자본재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결과가 다름이 아닌 대일무역역조인 것이다.

경제협력 요청의 논리

한국정부는 과거 식민지통치의 대가로써 해방 후는 공산주의와 직접 맞서는 대가로 일본의 협력을 당연한 일로 생각해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이 안보의 논리로 경제협력을 원하는 한편 일본은 평화주의 현법을 구실로 삼아 절대로 그 명목으로는 응하지 않았다. 이런 속에서 대일무역불균형 해소가 경제협력을 요청하는 핑계로 기능한 것이 아닐까.

국내여론에 호소할 때도 잇을 수 없는 과거의 기억에 더불어 지금 현재도 수탈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충분히 줄 수가 있다. 만성적인 무역불균형은 상대가 상대일 만큼 그 비판의 화살이 간단하게 일본을 향해 날아간다. 적어도 한국내에서 대일비판을 해서 욕을 얻어 먹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일무역적자문제는 스케이프고트로 씌어진 면이 있다.

이 문제는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미묘한 변질을 보였다. 1980년 초반, 전두환 정권시기에 사상 최대의 경제협력이 체결되었다. 소위 40억 달러 차관이다. 1979년의 제 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한 경제침체는 새 정권 창출의 뒷받침이 되었으나 출범 이후는 역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현안이 되었다. 이 때도 역시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였기 때문에 그 정치적 정당성을 경제회복과 발전에 찾아야 했다.

전두환 정권은 한국내의 구 친일로비를 숙청하여 세대교체를 이루면서 안보협력을 전면에 내세워 60억 달러의 막대한 정부차관을 요구했다. 때마침 일본교과서 문제로 양국간의 대립이 심했고 갑작스러운 요구에 일본은 애당초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액수는 1966년부터 81년까지 제공된 자금의 14배에 달하는 규모였고 그때까지 핑계라 하더라도 경제협력의 명목으로 그러저럭 했던 자금지원을 안보문제의 인식일치를 전제로 요구해 나섰기 때문이다

그 당시 강경한 대일 자세의 배경에는 반일 내셔널리즘의 고양어 있었다. 한일간의 현안을 꺼내어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일비판은 내부의 불만과 비판을 외부에 돌리는 상투수단이기도 하고 정당성의 표시이기도 했다. 양국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될 조짐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에 주한 미군철수문제 때문에 차가워졌던 한미관계가 재결합을 하면서 미국이 중계에 나섰다. 결국 한국이 안보협력의 명분을 뒤집어 일본도 액수와 협력형태를 조정하여 40억 달러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대일교섭을 주도하기 위하여 내셔널리즘을 환기시키는데도 대일무역불균형이 핑계가 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전반까지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일무역적자를 표적으로 삼아 직접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1993년부터는 김영삼 정권이 출범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전에 벌써 대일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일본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정권의 대일 정책의 기초는 첫째, 미래 지향적인 선린 우호관계의 유지, 둘째, 그러한 방향으로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중군위안부 등 과거청산의 문제와 한일무역역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일본이 잘 하면 우리도 잘 한다는 조건부를 내세운 셈이다.

이런 정책자세에 의하면 대일무역불균형이 해소가 안 되는 한 수업선다변화정책이 폐지될 수도 없고 오히려 더 문제시하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도 대일 무역불균형문제에 인한

불이익이 뒤틀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간에 현안으로 여겨져 왔으니 그냥 미해결사항으로 이어 받은 감이 난다. 또한 그 원인과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명백하게 한 셈이다.

과거청산문제와 무역역조문제는 동일선 위에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또 그렇게 여겨져 왔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물론 뿌리를 따져 보면 같은 곳에 수렴하나 책임론이나 개선 법을 추구할 경우 똑같은 논리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표 5. 기계류의 대일수입비중

	기계수입	대일수입	일반기계	대일수입	전기기계	대일수입	정밀기계	대일수입
1995년		40017 15041 (37.6)		20398 8617 (42.2)		4204 1895 (45.1)		6216 2885 (46.4)
1996년		43313 14650 (33.8)		22340 8585 (38.4)		4633 1850 (39.9)		6584 2660 (40.3)
1997년		34772 11761 (33.8)		16959 6213 (36.6)		4940 1880 (38.1)		6076 2476 (40.9)
1998년		18568 5612 (30.2)		7901 2337 (29.6)		3377 1373 (40.7)		3461 1152 (33.3)
1999년		24062 8504 (35.3)		10028 3667 (36.6)		4920 2095 (42.6)		4561 1766 (38.7)
2000년		31639 12167 (38.5)		13879 5744 (41.4)		6123 2495 (40.7)		6572 2734 (41.6)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표 1 과 같음

5.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맺음말을 대신하여-

1965년 이후 기본적으로 그 틀을 유지해 왔던 대일무역역조문제는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양상을 달리했다. 우선 대통령 자신이 知日이고 한일관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일본의 과거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면서도 그것을 트집잡아 상호주의적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 그 자세는 98년의 '21 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으로 알 수가 있고 일본문화 개방에도 나타났다. 또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97년에 IMF 위기가 터져 대일무역적자문제는 한 숨에 날려 중대한 문제로 비치지 않게 되었다는 측면도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 자체가 문제시 되어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WTO의 룰과도 어긋나는 수입선다변화정책은 예정보다 빨리 98년에 철폐되었다.

한일간의 현안으로서는 어업문제와 교과서문제가 계속 대립의 구도를 보인 반면 무역불균형문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아시아의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300 달러 규모에 달하는 자금지원책 '宮澤구상'이 준비되었으며, 한국에 대해서도 금융기관들이 신용기일의 연장 등 대응에 나서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일무역은 계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심한 경기후퇴 속에서 무역수지는 흑자 전환했다. 이대로 흑자기조가 지속이 된다면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대일무역적자를 예전같이 '악 놈'으로 몰아 붙이긴 힘들게 된다

'한 나라에 과도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은 대일의존적인 경제체제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적 안전보장의 논리를 원용하면 나름대로의 정합성은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소위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서서, 또 한일 양국이 심각한 경제정체를 겪으면서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파트너쉽의 테두리아래 '한일자유무역협정' 구상이 거론되어 그 체제 확립을 향해 각종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30년 전에 '矢次시안'이 물의를 일으켰던 것과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물론 그 당시와는 발전단계도 다르고 사회적인 배경도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 지금은 양국 다 구조개혁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효율적으로 상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서로 도움이 필요하다.

한일 양국의 전문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일수입이 늘어 대일무역적자가 더 커질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문제시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일치를 봤다. 그리고 그런 정태적인 효과보다 동태적인 이익을 더 중요시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이러한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거의 한일경제관계는 어떻게 총괄이 될까.

여태까지의 대일무역불균형문제는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한일간의 현안과 결부시켜 한국측이 일본의 양보를 얻어낼 때 기능을 다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향후 현정부의 노선이 계속 이어져간다면 예전과 같은 무역불균형을 둘러싼 논의는 정치적이슈로 부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표 5 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경제의 대일의존적인 구조가 극복된 것은 아니고 자본재의 대일의존은 여전한 상태에 있다. 한국의 주종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입대체를 적극 진행중인 기계류의 설계기술 등, 핵심 부문은 아직도 내부화 못하고 일본에 의지하고 있다. 기술 갭을 축소 안 하는 한 한일간의 무역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양국관계가 더더욱 긴밀하게 결합해나가면서 대일의존도를 낮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기도 한다. 한일간에는 아직도 안 풀린 현안들이 놓여져 있고 앞으로도 감정적인 대립이 심화될 수도 있다. 그 때 또다시 무역불균형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아로새겨 주체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 자기들의 책임을 명심하고 '극일본' 등의 좁은 틀을 넘어 여태까지의 일본모방이 아닌 경제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 한다.